

윤, 슈카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에 "주식 세제 개혁 과감하게"

슈카 "K디스카운트, 정말 가슴 아파" 윤 "회사법·상법 꾸준히 바꿔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유류브 경제 부문 구독자 수 1위인 '슈카월드'의 슈카(본명 전석재)가 한국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슈카는 이날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픈 단어"라며 "(기업들)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며 이사회 역시 이같은 결정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카는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주식시장 세제 ▲주

주 보호 미흡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 가면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겠다"고 답했다.

◆윤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증시의 도약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자신의 두 가지 원칙으로 ▲국민과 기업의 상생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 등을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고수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러들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면 은행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제재 의지를 밝혔다.

◆윤 "투명한 대출 플랫폼으로 갈아타기... 이익은 국민에"

이날 민생 금융 분야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출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에 시작된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매우 선호했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근무 중인 한 직장인은 "이번에 주택담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다"며 "1년에 60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주소현 이화여자대서비스학과 교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말하자면 기술과 혁신을 이용한 금융소비자보호 혹은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 범위와 규모 등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투명한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주택담보의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 경쟁시스템을 통해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16조원 정도의 이자 인하 효과가 있겠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16조원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원이라는 이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윤 "금융은 계급 갈등 완화·국민통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나 경제정책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바로 금융이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기업-근로자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는 이유는 바로 주식투자, 연금 등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는 부동산 과열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건 때려야 될 수 없다"며 "과거에는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부수적인 부작용을 풀어갈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북구의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지난 12일 북부녹색어린이회 소속 회원 자녀 14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북구의회 견학에 이어 ▲북구의회 교육영상 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3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전반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본회의 3분 자유발언에서는 공부와 성적 위주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진솔한 심경을 토로하였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환경 유지를 위한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안', '전동킥보드 사용 시 지켜야 할 규칙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가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다"며 "오늘 모의의회가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슬비기자

민주 "윤 정부, 건정 재정 내세우더니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건언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건정재정을 내세우

민주 "국민 마음 사려는 관련 선거 아닐 수 없어"

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쪼개서 퍼주기,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상반기 SOC예산 12조 4000억 조기 집행, 숙박비 할인쿠폰 일자리 채용 등 설 민생 대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에 차감계 식은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관련 선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를 뒤엎으며 세수를 펴고도 부족한다"라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말라가는 국가 재정을 대체 어쩔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가재정이 어찌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퍼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한결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제 나올 한숨도 없다. 염불은 뒷전인 채, 잣대만 탐하는 정부와 여당을 국민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